

협회의 발전방향과 회원의 자세



서 기 원 교수
순천향대학교 경상대학장

1. 시련이 계속되는 낙농육우산업

우리의 낙농육우산업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맞은 적이 일찌기 없었음을 실감한다.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가해오는 자유무역압력과 이를 구실로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로 낙농육우정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낙농육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낙농육우산업은 국민의 소득성장과 더불어 착실한 수요성장이 예상되는 부문이고 국민건강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거듭 천명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표명과는 달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낙농육우산업은 사안에 따라 정부의 투융자 확대없이 법이나 제도를 고치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흔히 오늘의 낙농육우산업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논할때면 대부분의 사람이 국제적인 수입자유화의 조류탓으로 돌리지만, 그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그러한 조류에 대응해서 우리의 구조와 경영방법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수입자유화의 압력이 가져다준 결과는 아니다.

1989년11월, GATT의 BOP(국제수지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97년까지 농축산물시장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것이 당장 지금의 우리 낙농육우산업을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때의 BOP결정은 우리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지속했기 때문에 결과한 것일뿐, 최근과 같이 오히려 적자가 계속될 땐 당초의 결정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의 예는 과거 이태리, 스페인 등이 선례(先例)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쇠고기 수입량을 5만5천톤으로 잡고 미국과 협상할때도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국내 수요 연 18만5천톤의 약 35%만 수입하고, 60%이상은 국내공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었다. 그러나 결과는 12만5천톤이나 수입되어, 이는 미국사람까지 놀라게했다. 국내공급 60%는 어디가고 수입이 오히려 67%나 차지했는데 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쇠고기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행동이었다.

를 남긴 바 있다. 그랬다가 다시 흑자가 나면 그때가서 재론하여 또 유예기간을 얻으면 그만큼 개방일정은 연기될 수 있다.

UR 협상의 진행이 우리의 낙농육우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불성설이다. UR 협상은 지금도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언제 타결될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90년말까지 타결키로 한 UR 협상이 결렬된 것은 자유무역주장이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EC간에 보조금삭감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보조금삭감협상도 전액이 아닌 부분적인 삭감이라면 어차피 공정경쟁에 의한 자유무역은 의미가 없어지는 성질의 것이다.

또 흑자는 쇠고기에 관한 한 미국의 압력때문에 수입이 크게 늘어나 육우산업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한지만,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쇠고기 수입량을 5만5천톤으로 잡고 미국과 협상할때도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국내 수요 연 18만5천톤의 약 35%만 수입하고, 60%이상은 국내공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었다. 그러나 결과는 12만5천톤이나 수입되어, 이는 미국사람까지 놀라게했다. 국내공급 60%는 어디가고 수입이 오히려 67%나 차지했는데 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쇠고기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행동이었다. 금년(92년)에는 다시 수입량을 13만2천톤으로 잡고 있지만 연말에 가면 아마도 그 이상이 될 것이 틀림없고 그

렇게 되면 육우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쇠고기수입이 마구잡이로 늘어나자 수입쇠고기값이 돼지고기가격수준까지 접근함으로써 이제는 육우도 양돈도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결국 낙농육우산업은 국제적 요인보다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낙농인들이 것처럼 소원하던 낙농진흥법개정을 단지 정부부처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나, 90년도에 우유공급이 과잉이었을때 그에 대한 대책수립에 인색하던 정부가 91년도에 공급부족현상이 빚어졌을 때는 필요이상으로 분유수입을 마구 해낸 것이나, 또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들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해 달라고 그토록 애원했는데도 끝내 묵살해 온 것들은 모두 정부가 그동안 낙농육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한데서 결과한 것으로, 이를 국제적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않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수 없다.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낙농육우산업의 비중과 역할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커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낙농육우농가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노력만 집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조직한 단체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이익(利益)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때마침 낙농육우협회는 새로운 운영진을 맞이했고 이를 계기로 보다 확실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와 있으므로, 이제 여기서는 협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또 회원 각자는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 협회의 위치와 기능

사회에는 각계 각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대기업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조직하고 중소기업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뭉치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등은 모두 구성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농축산업분야 역시 농축산인의 이익을 지키려면 작목별, 지역별로 독자적인 조직을 가져야 하는데 낙농육우협회가 그중의 하나임은 다 아는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각 이해집단간의 이해(理解)는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대립의 정도가 심화되는 것이 상식이다. 기업과 노동조합,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농축산업부문의 이해대립 등이 그것이다. 이때 이를 조정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다. 물론 정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려면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대부분은 정부가 수립·집행하는 정책여하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정부는 언제나 엄정중립, 객관적 판단,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실체(實體)로 정의(定義)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만 의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주관적 판단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치우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낙농육우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으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다른 집단, 특히 기업집단의 이익에 치우쳐 낙농육우농가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럴때 우리는 정경유착의 결과로 농축산업 분야가 희생되었다는 표현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낙농육우농가도 그들이 만든 이익집단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결정의 수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고, 이때 발휘해야 하는 것이 정치적 기능이다.

물론 이익집단으로서의 협회가 수행해야 할 정치적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과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해당산업의 중요성을 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등의 사회적 기능과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상호지원, 시장정보의 수집·유통, 생산자재의 공동구매와 생산물의 공동판매, 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행하는 경제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도 그것이 정책집행이나 법 및 제도가 잘못된 데서 결과한 불이익보다 클수 없음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 당장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 보면 그 대부분이 협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지 경제적 기능으로 풀어낼 것은 그다지 많지않다. 경제적 기능조차도 정책이나 법,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야 그 실효가 거두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축산인 가운데는 아직도 협회와 협동조합의 성격을 잘 몰라서 혼돈하고 있는 점이다. 양자는 다같이 축산농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지만, 그들은 가능과 활동면에서 엄연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협회는 그의 중심기능이 구성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기능수행에 있는 반면,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조장(助長)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의 수행이 중심기능이다.

물론 양자간에는 어느정도의 공유(共有)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협회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범위가 있고 반대로 협동조합에도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범위가

협회는 회비단체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도 별 영향이 없지만 협동조합은 출자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약간의 제재에도 경영상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때문에 외국에서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한 활동에만 전념하고 정치적 기능수행은 협회나 동업자단체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여건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꼭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갈수록 기능분화가 이루어져 갈 것이고, 특히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려면 농민단체의 정치적 기능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어느정도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은 주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들을 풀어내기 위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을 뿐, 해당업종 전반에 걸친 넓은 의미의 정치적,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는 서로 성격도 접근방법도 다르다. 정치적 논리에 기초한 행동은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 그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경제적 논리에 기초한 활동은 정부가 제정한 법이나 제도, 규칙 등에 의해 크게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경제성, 효율성등에 충실해야 함으로 고도의 정밀성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개의 논리가 한조직체안에서 동시에 추구된다는 것은, 자칫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축산단체가 협회와 협동조합으로 나뉘어 별개의 조직체를 구성하는 이유도 이런데서 찾을 수 있다. 만약 경제적 기능수행이 중심인 협동조합이 경제적 기능수행은 소홀한 채 정치적 기능수행에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는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을 무산시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이유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협회는 회비단체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도 별 영향이 없지만 협동조합은 출자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약간의 제재에도 경영상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때문에 외국에서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한 활동에만 전념하고 정치적 기능수행은 협회나 동업자단체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양축농가의 권익대변을 위한 정치적 활동은, 육우의 경우 전국육우생산자협회가 전담하고 낙농의 경우는 전국우유생산자연맹이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은 각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자기 본연의 기능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여건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꼭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갈수록 기능분화가 이루어져 갈 것이고, 특히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려면 농민단체의 정치적 기능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어느정도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3. 협회가 해야 할 구체적 역할

5.16혁명 이후 제5공화국이 끝날때까지의 우리의 정치사회환경은 각급 농민단체, 축산단체가 마음놓고 그들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도처에서 민주화, 자율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그 속에서 각계 각층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농민단체, 축산단체들만 정치적기능을 소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그만큼 축산농가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앞으로 협회가 수행해 나가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첫째, 협회는 정치적 압력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러자면 협회가 중심이 되어 낙농육우농가의 정치적 힘을 대단위로 결집해야 가능해진다. 낙농육우농가는 경제적 힘은 약할지 모르나 일단 단결만 되면 정치적 힘은 키울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농축산업을 열성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있는 농축산농가에 대한 배분(配分)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그것이 제공하는 먹거리와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큰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힘을 무시할 수 없는데 있다. UR협상과정에서 미국이 EC각국에 대하여 보조금삭감과 부과금의 관세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EC각국도 그중 일부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그들 나라의 농축산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투표권, 즉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다.

축산인들의 정치적 힘이 결집(結集)되려면 우선 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야 하지만, 협회도 교육, 정보제공, 조직강화를 통하여 그 힘을 못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협회는 정치적 로비활동능력을 키워야 한다.

낙농육우농가의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정리하여 이를 정부, 입법기관, 언론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수시로 전달하고 이해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 대하여는 낙농육우산업에 불리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한 법은 적기에 제정되도록 로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수입의 억제, 투융자확대,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러

한 활동은 낙농육우산업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셋째, 축산물 수입자유화 조류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정책의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이를 정부에 제시하는 일이나, 기왕에 수입량이 확대된 경우에도 그것이 국내 축산물에 피해를 줄때에는 지체없이 구제(救濟)신청을 내는일도 협회가 할 일이다.

또 협회는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축산물 내지 축산제품의 우수성도 홍보해야 한다. 수입축산물이 함유하고 있는 각종 유해성분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이야말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넷째, 재벌기업, 대기업들이 축산업에 진출하거나 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양축농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때에는 전체농민이 연대하여 그 회사제품의 불매운동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협회는 우유, 쇠고기의 수요개발을 위한 제반활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선전, 광고, 포장개선, 등급육과 품질을 식별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의 실시, 시장조사활동과 연구사업의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 일, 역시 협회가 할 일이다.

끝으로 협회는 새로운 축산기술을 끊임없이 도입, 보급함으로써 낙농육우의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기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는 연구개발사업이 전개돼야 가능한 것이지만, 연구사업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함으로 그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회원의 자세와 역할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육우농가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한 단체이지 정부가 만든 단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 회원가운데는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협회운영자의 자세만 질타하는 것을 자주 보게된다. 더욱이 회원중 약 40% 정도는 회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

흔히 회원들은 협회운영자를 뽑았으니 앞으로 모든 협회활동은 그들만 하는 일로 생각하고 방관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회원들이 협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데 협회운영자인들 무슨 힘을 가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는가. 회비를 제대로 내야 활동을 위한 예산이 짜여질 것이고 협회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야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 아닌가.

다하니 이 얼마나 딱한 일인가.

흔히 회원들은 협회운영자를 뽑았으니 앞으로 모든 협회활동은 그들만 하는 일로 생각하고 방관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회원들이 협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데 협회운영자인들 무슨 힘을 가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는가. 회비를 제대로 내야 활동을 위한 예산이 짜여질 것이고 협회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야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 아닌가.

무릇 이익집단이란 것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때만 비로소 존립(存立)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협회는 자조(自助)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각자가 주인의식(主人意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때야 힘이 생기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낙농육우산업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압력단체로서의 위상이 정립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돼야 낙농육우산업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협회임원 몇사람의 능력만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회원의 자세전환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장을 하면 흔히 낙농육우농가들은 전망이 흐리면 언제라도 집어치우면 그만이라는 패배주의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것 또한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낙농육우산업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거기에 정부가 조금만 뒷받침하면 전망이 밝은 산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낙농의 경우엔 아무리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신선우유까지

수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육우의 경우에도 한우의 품질만 개선시켜 나가면 가격으로서가 아니라 품질로서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한 분야이다.

최근 수입쇠고기가 마구잡이로 방출되어 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한우쇠고기가격은 도리어 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단적인 예이다. 더구나 최근 전남 강진지역에서 소의 체중을 750kg 수준까지 늘릴 수 있는 한우비육방법이 성공을 거두었는데, 만약 이 기술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자유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조차 미국을 비롯한 EC제국들이 우유, 쇠고기등을 식량의 개념으로 다루고, 한결같이 NTC품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기때문에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시장의 완전개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낙농육우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려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시켜 낙농육우정책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협회활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은 우리의 정치적 기능수행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낙농육우농가 스스로도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첫째, 낙농육우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우선 낙농제품과 쇠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이루어 나가고 동시에 소비자의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

낙농육우농가는 집단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각자 개별활동을 통해 자기경영을 유지해 나가도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농축산업은 어느 분야이던 아무리 기계화가 진전되더라도 개별활동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집단활동에서 얻는 이익이 개별활동에서 얻는 이익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이다. 동업자단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 국제화에의 대비, 정치적 기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낙농육우산업의 유지발전 등을 기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사용과 지나친 항생제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건강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소비자에게 표명되어야 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던 소비자는 양(量)이나 가격보다는 질이나 안전성쪽을 택하게 된다는 것은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낙농육우농가 스스로 구조개선, 경영합리화, 생산성향상 등을 기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①단위당 생산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표준투입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맞게 물재(物財)를 효율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사료급여, 급수, 분뇨처리 등을 가급적 자동화하여 노동비를 줄이고 간접비용의 지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②단위당 생산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낫소의 경우 산유량은 6700kg 이상을 실현하고 유지율도 현재의 3.6% 수준을 선진국수준인 3.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

육우의 경우도 1일 증체량을 1.2kg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총체량도 최고 800kg까지 높일 수 있는 품종개량과 기술개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③이를 위하여는 사료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자급사료의 배합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④사육규모도 낙농의 경우 30~40두 수준으로 높이고 육우의 경우도 50두가 넘는 규모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⑤근대적 경영기법을 익혀 이를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의 낙농육우산업은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경영으로는 이제 생존조차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사육두수가 30두를 넘을 때에는 간단한 전산(電算)체제까지 갖추어 대응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

셋째, 낙농육우부문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도 힘써야 한다. 지금까지 농축산부문에 대하여 말할 때는 흔히 그의 생산활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 분야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려면 낙농육우농가는 조직을 중심으로 배합사료의 생산, 낙농기자재의 공급, 우유 및 낙농제품의 가공, 저장, 유통 등의 분야까지 폭넓게 참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이 분야의 사업들이 대부분 일반기업에 의해 영위돼 왔고 또 이들은 낙농육우산업과 농가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이윤추구에만 치달아 왔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경제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낙농육우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모두 농가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가족경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유형과 이를 가능케 하는 시설근대화, 자동화도 적극적으로 기해 나가야 한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농촌은 노동력의 고갈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으로 고용노동으로 농축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목부에 의존하여 축산업을 유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가



족노동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경영유형을 찾아내야 한다.

끝으로 낙농육우농가는 집단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각자 개별활동을 통해 자기경영을 유지해 나가도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농축산업은 어느 분야이던 아무리 기계화가 진전되더라도 개별활동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집단활동에서 얻는 이익이 개별활동에서 얻는 이익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이다. 동업자단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 국제화에의 대비, 정치적 기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낙농육우산업의 유지발전 등을 기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5. 단결만이 살길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면 낙농육우인들은 각자의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한결같이 동업자단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

낙농육우인의 단결이란 각 양축농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을 결집하여 밀려오는 국제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지원능력

을 최대한 낙농육우산업으로 유도하며 육성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다. 낙농육우인들이 모두 개인주의로 치달아 흩어지면 정부의 관심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 자명하며 그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결정, 집행되더라도 이를 막아낼 길이 없다.

이러한 모든 일에 구심체가 되는 것은 협회이다. 협회는 낙농육우농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代) 정부, 대국회 로비활동을 강화하여 낙농육우농가가 안심하고 양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낙농육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회원들이 굳게 뭉쳐 협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소기의성과를 거둘 수 있다.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참여하고 없으면 흩어지는 자세여서는 안된다.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낙농육우산업은 농가와 협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서로 남의 탓만 해서는 안된다. 다같이 밀어주고 협조하고 협회활동에 동참할때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